

2019년10월14일

문부과학대신 하기우다 고이치 님께
문화청장관 미아타 료해 님께

**문화청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해」의
보조금 불교부 결정에 관한 성명**

일본문화정책학회
회장 구마쿠라 스미코

일본문화정책학회는 2019년8월9일 성명문 《「아이치트리엔날레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중지 에 관한 성명~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 억압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전·성숙으로~》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의사표명과 협박·위압등에 의해 중지된 전시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9월25일에 「아이치트리엔날레 추진방향 검증위원회」가 전시 재개 방침을 제시함으로 10월 8일에 전시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26일 문화청에서 「아이치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해」라는 제목의 보도가 발표되고 「보조금적정화법 제6조등」에 근거해, 채택이 결정된 7,829만엔 전액을 불교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안건이, 교부신청단계에 있어 ‘불확실성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신고 미비’를 이유로, 다른 사업들과 달리 불투명하고 불균형한 심사로 채택 후 돌연 전액 불교부라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일본 문화정책학회로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청도 인정한 것처럼 이번 조치는 「전례없는」 것으로, 이렇게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정책 담당자는 정부기관 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진흥재단등 NPO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는 그러한 문화정책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회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으며 더불어 향후 문화활동에 있어서 문화청 의향에 적합한 활동이 아니면 보조금이 채택된 후에도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위축효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문화예술기본법에 있어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표현력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상호이해와 서로를 존중하는 토양을 제공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의 사회를 형성시키는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화청은 본 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의 「팔길이 원칙(*)」을 중시한 지원 자세를 취해왔고, 이 점에 관해 본 학회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 학회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이번 조치를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국가는 자금을 제공하나 사용용도나 예술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정 거리를 둔다는 개념.

(번역 일본문화정책학회 이사 민 진경/ 회원 이 지영)